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 대응 : 토론*

함 준 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본 논문은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을 관련 연구문헌, 주요국과의 통계 비교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현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물가구조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유통구조와 가격기구의 경직성, 높은 물가 변동성, 소비자물가의 하방 경직성 등으로 요약된다. 저자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진입규제 완화, 정보공개 확대 등의 구조적인 정책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경제가 나쁜 균형경로로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총수요 관리 정책은 물론, 불공정거래 감시, 생필품 가격 인상시기 분산, 공공요금 관리 등 단기적인 미시적 물가관리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정부대응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간략히 토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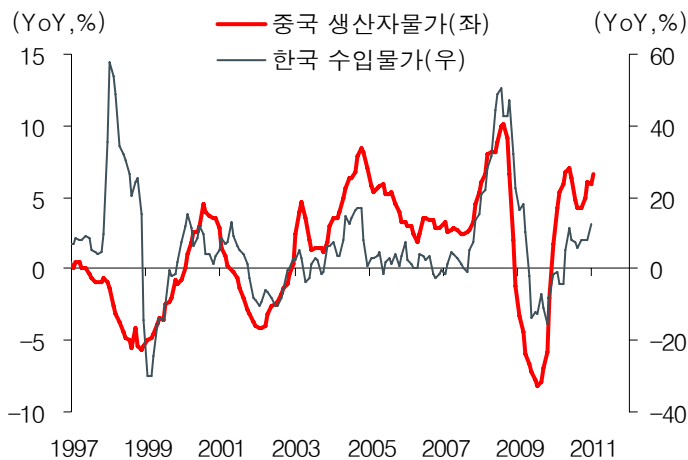
첫째, 올해의 물가상승 압력은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는데 그 근거로서 다음의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총수요 측면의 압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공급 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던 물가 상승세가 최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총수요 압력에 민감하며 그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서비스물가와 근원물가도 최근 가파르게 높아지는 추세여서 우려가 크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 튼 물가상승의 불씨가 경제 내 잔존하는 잉여유동성과 맞물려 빠르게 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그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어려움 등으로 금리의

*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경제학회 주최 제1차 정책세미나(2011. 3. 10(목),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오르는 물가, 향후 전망과 대책」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정상화 속도가 더딘 가운데, 가계부채는 오히려 확대되는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실행이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와 신흥국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유입 등으로 해외 발 물가충격이 우리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대응한 정책도 시차 등으로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 이후 국내 임금상승률이 명목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어서 최근의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공급 측 충격요인은 그 속성 상 단기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 국제원자재 수급구조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해외 발 공급충격은 우리 경제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국제 상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상 기후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 외에도, 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글로벌 금융완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 증가 등, 수요 측 요인과 글로벌 자원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안전판 역할을 하던 중국도 이상 기후 등 공급 측 요인과 과잉 유동성 문제 등 수요 측 요인이 맞물리면서 대내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내수를 보다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1995년 5.5%에서 2010년 16.8%로 크게 높아진 상황으로, 중국의 임금상승과 위안화 절상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입물가의 상승을 통한 중국 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중국의 생산자물가와 한국의 수입물가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둘째, 이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물가상승 요인이 복합적이며 지속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대응은 주로 공급 측면의 단기적인 물가충격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느낌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공급 측 불안요인이 장기화 될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조절 등 선별적 물가관리 정책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반영한 자원배분 조정 등 자생적인 물가충격 흡수기능을 왜곡시켜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예컨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물가를 과도하게 통제하게 되면, 가스, 전력 등 공공서비스 가격의 현실화가 지연되어 과소비 유발 등 비효율이 초래되며, 중장기적으로 해당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궁극적인 재정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재정의 악화가 추가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논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향후 정책대응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통화, 환율, 재정 등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의 실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적절한 총수요 관리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미시적 대응책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상향 조정과 함께 유연한 환율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발 물가상승 충격을 흡수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준금리의 조정이 지연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시장 실세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조정을 통해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의 운용 입지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아직 적자기조 유지가 지속되고 있는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확대 등 완화기조의 금융정책도 조속히 정상화시켜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차제에 낙후된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가안정 기조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서비스부문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장개방, 차별적인 규제 완화, 이해당사자 그룹의 과도한 기대추구 억제 장치 마련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